

[주간동향] 2006. 7. 27~8. 2

한국여성개발원 강민정 전문연구원

- ❖ 보건복지부, 이혼 후 생계곤란도 긴급복지 지원
- ❖ 여성가족부, 제 1차 중장기 보육계획 발표
- ❖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육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 ❖ 육군, 인사관리제도 개선으로 출산장려책 시행
- ❖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출범
- ❖ 북한, 남녀평등권법령 제정 60주년

### ❖ 보건복지부, 이혼 후 생계곤란도 긴급복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나 빚을 얻어 병원비를 납부하는 등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때에도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하게 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가장의 사망이나 가출, 질병·부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이혼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 긴급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혼'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의료지원에 있어서도 병원이송, 긴급수술 등으로 상황이 급박하거나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한 사례에 대해 시·군·구의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판단해 지원을 결정하는 등 재량권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1개월 이상 단전돼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신꽃시계 팀장은 "지난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 이후 6월 말까지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6,375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며 "더 많은 사람이 긴급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 여성가족부, 제 1차 중장기 보육계획 발표

여성가족부는 7월 2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플랜'을 발표했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사회활동은 증가한 반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미흡한 상태"라며 "이번 계획은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줘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현재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합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은 47%, 정부의 보육비용 재정분담률은 35.8%에 불과하다. 재정분담률이 91%에 달하는 독일이나 70%에 이르는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OECD국가 평균인 60%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보육 기반 조성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등 5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공보육 기반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2005년 6월 현재 1천352개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천700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시 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우선 확충된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기본보육료를 지원해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 경우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14.3%가량 줄어든다. 보육료지원 대상 또한 확대되어 차등보육료 지급 대상이 2009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취업부모 자녀에게 보육시설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는 등 취업부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부모협동보육시설 도입,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중장기 보육계획 실행을 계기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아이는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한다'는 의식을 뿌리내리게 한다는 방침이다.

#### ❖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출범

기획예산처는 7월 27일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이 이날 오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기획단은 기획처와 재경·교육·노동·행자·문화·여성부 등 10개 부처 22명으로 구성되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처합동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서비스 정책을 만들고 담당 인력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게 된다.

기획단은 세부적으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재정사업의 성과 점검·평가 및 투자 우선 순위 조정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급확대 계획 수립 ▲사회적 기업 제도 발전, 사회보험제도 정비 등 관련 분야의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낮은 수익성 또는 제도 미비 등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서비스로 이윤추구보다는 상부상조·이타주의 성격이 강하고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기획처는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미 50%를 넘는 등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국민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각 부처를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 충족률을 추계한 결과 72.4%에 머물렀고 특히 사회복지(48.1%), 보건의료(63.2%) 분야의 충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2003년 기준 12.5%로 영국 21.1%, 네덜란드 27.8%에 비해 크게 낮다면서 앞으로 사회서비스 분야가 향후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처는 사회서비스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가정에서 주로 여성노동에 의해 해결되던 보육·노인·간병 등의 돌봄 서비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주거 등 복지서비스 ▲안전·고용·환경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 ❖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육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8월 1일 ▲여성어업인의 지위향상 ▲전문 인력화 ▲복지·문화증진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04년 말 현재 어업종사자 12만2천명 중 여성이 46%인 5만6천명에 달해, 여성이 수산업과 어촌 발전의 큰 인적 자원임을 인식하고 여성어업인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여성 지위향상과 관련해 지금까지 남성위주의 어업면허 등 재산권의 소유나 어촌계 등 생산자 조직 가입, 정책자금의 대출 대상 등이 대폭 개선된다. 이에 따라 어업권 등 재산의 공동소유, 남편과 함께 공동어업경영인으로서의 지위 확보, 여성어업인 명의의 출하 및 관리통장 갖기 운동, 영어법인 설립 등 생산자 조직에의 참여와 여성임원의 확대 등이 본격 추진된다.

여성어업인 전문인력화와 관련해 2011년까지 어업인후계자의 10%를 여성으로 육성해 이들에게 영어기술과 전문경영능력을 높이고 여성의 섬세함을 활용해 경쟁력이 높은 분야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연수 기회도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10년까지 여성어업인 교육훈련 등에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농림부, 여성부 등과 함께 ▲농어가 도우미

등 인력지원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영유아 양육비지원 등 ▲문화 여건개선 및 국제결혼 이주여성 적응지원 등에 총 607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정책추진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5년 주기의 어업총조사에 여성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조사하기로 했다.

#### ❖ 육군, 인사관리제도 개선으로 출산장려책 시행

육군은 군내 출산장려를 위한 내용을 담은 '군인·군무원의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 시행에 들어갔다고 8월 1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군인들의 출산장려를 위해 부부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신혼 초 5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모든 군인이나 군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보직을 이동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임신 중인 여군이나 여성 군무원의 인사이동이 일정기간 연기된다.

개선안은 부부 군인이나 군무원에게는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결혼 후 5년 동안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육군은 이를 위해 부부가 함께 생활하기 쉬운 지역으로 부부 가운데 한 명의 보직을 우선 조정해 주기로 했으며 부부 군인이나 군무원이 5년간 같은 부대에 근무하거나 선호지역에 근무했을 경우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여군이나 여성 군무원이 임신했을 경우 임신 2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는 인사이동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배우자가 군인이나 군무원일 경우 배우자의 인사이동도 일정기간 미룰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모든 군인·군무원이 세 번째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인사발령 때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보직을 이동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육군은 국방부 조사결과를 인용, 부부 군인의 출산율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08명(2005년 기준)보다도 낮은 0.83명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육군에는 부부 군인이 953쌍, 여군이 3천200여명, 여성 군무원이 1천500여명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 북한, 남녀평등권법령 제정 60주년

북한 언론매체들은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 제정 60주년을 맞아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법 제정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는 내용을 잇달아 내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여성 존중의 위대한 정치가 펼쳐준 자랑스런 현실'이라는 글을 통해 "지난 60년간 1천100여 명의 여성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출되는 등 수만명의 여성들이 각급 주권 기관의 대의원으로 뽑혔다"며 "여성 영웅과 명예칭호 및 학위학

직 소유자들도 근 8천명이나 배출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체육부문에서는 최근 10여 년간 150여 명의 여성이 국제무대에서 공화국(북한)기를 높이 휘날려 인민 체육인, 공훈체육인의 영예를 안았으며, 학계에서는 모녀 박사인 첫 여성인민과학자 유숙근과 후보원사 김영진을 비롯해 5천400여명의 학위학직 소유자가 나왔다"고 여성들의 역할을 전했다.